

데스크 시각

감동의 연대 드라마를 펼쳐라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아권 통합 및 연대 여부가 20대 총선에서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으로 야권이 분열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호남에서 출발한 국민의당 바람은 전국을 강타하는 태풍으로 부상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새누리당-더민주의 양당 체제를 넘지 못하면서 여권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야권의 분열과 총선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

아권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승리는 고사하고 개헌 저지선(100석)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산은 간단하다. 호남(28석)을 석권하고 비례대표(47석)에서 20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분열된 야권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50석 이상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개헌 저지선도 장담 못해

하지만 김 대표의 제안은 다목표 포석으로 읽힌다. 야권 통합의 명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전략적 계산이 섞여 있는 것이다. 별다른 전제 조건 없이 통합하자는 제안은 국민의당에 사실상 무릎 꿇고 투항하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주자 지 지당을 주도한 안철수 대표에게는 정치권을 떠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김 대표의 제안에서 진정성을 느끼게하려면 통합을 주장하되 현실을 감안해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놔야 했다. 기습적인 제안에 앞서 국민의당과 진정성 있는 소통도 필요했었다. 김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지만 노회찬 그가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당장 김 대표의 제안으로 국민의당은 내분에 휩싸인 모습이다. 안철수 상임대표가 통합 불가론을, 전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야권 연대 검토 입장으로 맞

서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총선 공전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해도 시원장을 국민의당에는 최대의 약제가 터진 셈이다.

반면 더민주를 통합 제안으로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더민주 일각에서는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3자 구도로도 승산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고 착각이다. 더민주에 대한 민심의 신뢰는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최근 지지율은 40%대 초반인 반면 더민주는 20%대 중후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10%대에 머물고 있지만 무시하기 힘들다. 국민의당 지지율의 근간은 야권의 절대 지지층인 호남 민심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DJ 같은 통 큰 리더십 절실

감동의 연대 없이는 야권의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의 탄생을 막을 수 없다. 소통은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제안은 진정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9일 발표될 예정인 더민주의 2차 컷오프는 야권 연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컷오프 결과가 더민주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신호가 된다면 국민의당을 야권 연

대의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민주를 한쪽 팔을 떼어 줄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답답한 연대의 제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의당 일부 세력의 이탈을 기대하는 꼼수로는 총선 승리라는 대미를 잡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대표의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 광야에서 죽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양당 체제를 허무는 제3의 길을 위해서라도 연대를 통한 정치적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는 생전에 야권의 분열 및 통합과 관련, “자신을 버리면서 큰 틀로 연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야 세력과의 통합, DJP 연대를 통한 정권 창출 등으로 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야권 연대는 더민주나 국민의당 모두에 해당되는 정치적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호남에서는 피 터지는 경쟁을 통한 변화를, 수도권에서는 감동의 연대 드라마’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이 연대를 통해 정권 창출의 희망을 제시할 것인지, 분열의 프레임에 극복하지 못하고 공멸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엄중한 시대의 눈길에 주목하고 있다.

은펜클럽



서미정
광주시의원

새해를 맞은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과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2016년도의 세 번째 달을 맞이했다.

이렇게 빠른 시간처럼 복지 발전에 대해서도 현기증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으로 2016년도 광주시 장애인정책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다.

우리 시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 6만8112명이 있으며, 이중 1급 장애인은 5880명, 2급은 9296명, 3급 1만1828명, 4급 9912명, 5급 1만3508명, 6급 1만7688명이 있다.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에 가까운 3만2460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8088명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729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6865명, 지적장애인 5960명, 정신장애인 2922명, 신장장애인 1932명, 자폐성장애인 664명 순이다.

정식적인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장

2016년, 발달장애인의 희망이 시작되는 해

에 유형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는 정신이나 신체적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뇌성마비, 자폐증, 유전장애, 염색체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등으로 분류되며(위키백과 참조), 우리나라에서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 해당된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해다. 법의 주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크게 보는 이유는 발달장애인 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라서 그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지원은 이 사회의 최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와 함께 복지 전반에 있어서의 선진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와 인권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자기결정권 보장과 자조모임 구성, 개인별지원계획 및 평생교육 등의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하는 사회적 책임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09

년에 제정되었던 조례를 지난해에 발달장애인법에 맞춰 전면 개정했다.

앞서 통계를 보면 광주시의 발달장애인은 6624명이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 포함해 4배 이상의 사람들이 권리와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 숫자보다는 인권도시 광주라는 명성에 맞게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 모두 법에 대한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타 시도에 비해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일찍 가진 광주이기에 앞으로도 보다 선진적인 제도를 정착해 나가며 선진도시라는 명칭이 유지되기를 소원한다.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개소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광주는 사무실 설립과 인력 채용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 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서비스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 및 관련 업무자에 대한 교육,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에 대한 홍보, 가족 상담과 후견인 감독 등의 일을 한다.

이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인원은

적당하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도 들지만 새로운 기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에 맞는 힘찬 출발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지난해에 광주시 4개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통폐합을 주장해 올해부터는 2개 센터만 남았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하는 일들을 민간영역에서 수행을 해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적 센터를 가지고 거시적 활동을 한다면 자립지원센터는 구 단위 거점 역할과 함께 미시적이며 직접 대면 사업을 수행하는 민·관 상호보완 체계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폐합이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관계자들의 통폐합 결정이 아쉽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 것이라 믿기에 조금 돌아간다는 심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쉽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빠른 사회변화처럼, 올 한 해 발달장애인법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안착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루빨리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술술 피어나는 김홍걸 공천설 누가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지역에 전략공천 출마자를 발표하면서 광주에서는 3선 경기정 의원이 물러난 복구 갑에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유력했던 오기형 변호사는 수도권으로 전략 공천이 됐다.

당초 오 변호사는 동남 을에 공천 신청을 내고 면접까지 마친 뒤 지난 2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중앙당의 요청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지역에서는 오 변호사가 전략공천으로 복구 갑에 출마하지 않느냐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1차 컷오프된 3선 유인태 의원의 지역구이자 호남 지역 유권자 비율이 높은 서울 도봉 을에 출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에 따라 더민주 복구 갑 전략공천 대상자로 영업 인사와 당내 유력 인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단 영업 인사의 경우 대표적인 ‘박원순 맨’인 김민영 전 참여연대사무처장이 거론된다.

김 전 사무처장과 함께 복갑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부산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패까지도 김홍

걸 씨의 복구 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홍걸 씨 본인은 아직까지는 불출마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설이기는 하지만 그의 복갑 출마설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을 착잡하게 한다.

물론 아버지가 대통령을 지냈다고 정치 활동을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야권 상황이나 그동안 그의 행적을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개혁 공천을 너도나도 외치고 있는 당당에 김 씨는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알선수재로 구속된 비리 경력까지 있지 않은가.

김 씨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후시라도 아버지 이름을 팔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민주 역시 행여 김 씨를 이용해 호남 민심 이반을 주출력하려 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광주 사람들이 이처럼 어리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 부처 호남 출신 과장급도 찾기 힘들다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실무 책임자와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중간 간부인 이들이 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 과정과 예산 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들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데 기재부 예산실 등의 과장급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부서에 광주·전남 출신 과장급 간부가 아예 사라진 것은 올해 초 인사 이후부터다. 이전까지 최소 1~2명 정도 있었지만 신년 자리 이동과 함께 씨가 마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까지 조성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애

기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까지 사무관 이상 중앙 부처 공직자는 모두 1880명이었다. 하지만 대다수가 소위 ‘변방’으로 불리는 산하기관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 출범 이후 ‘호남 출대, 영남 편중’ 인사가 계속됐고 특히 경제 부처에서 간부 직원들이 이끌어 주던 지역 출신 장·차관이 사라지는 바람에 동반 소멸했다는 설명이다.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정책 결정을 놓고 맹목적인 애郷심에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 현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 보장 차원에서라도 중요 부처의 균형 인사는 필요하다. 재삼 정부와 당국 인사를 촉구한다.

無 等 鼓

어린 시절, 1970년대 중반에는 만화를 보려면 먼 소재지까지 나가야 했다. 나주의 한 면 소재지 만화방은 학생들로 늘 붐볐다. 남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만화는 단연 야구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등전 몇 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찾아간 만화방은 야구 만화에 푹 빠진 어린 아이들에게 원하는 만큼 볼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택한 것은 책을 몰래 옷 속에 넣어 나오는 것이었다. 부모에게 들키면 혼이 나

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책 도둑질은 막을 내렸다.

다행인 것은 만화책에서 시작된 독서가 중학생 때 고전 읽기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리어왕, 햄릿, 오셀로,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읽은 것도 그때다. 데미안, 희랍인 조르바(그 때는 책 제목이 그랬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동서양 고전도 중고등학교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이다.

마커스 주사의 소설 ‘책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 리젤도 그랬다. 죄책감이 없던 책이 계기가 돼 글을 배우고 책에 빠져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엄혹한 나치 치하에서 버틸 수 있었다.

‘책 도둑은 별거 아니다’라는 통념 속에 몇 년 전 60대 초반 한 남성의 고백이 화제가 됐다. 2013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광주 동부경찰서를 찾아 온 이 남성은 “45년 전 게임과출소 2층 아동서관에서 책 5권을 훔쳐 지금까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부디 좋은 일에 사용돼 달라”는 말과 함께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남겨 두고 훌연히 사라졌다.

다시 2년이 지난 엇그제, 60대 남성 2명이 대형 중고서점에 서 책을 훔친 혐의로 잇따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들어왔다. 두 명

책 도둑

기 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아시나요?



송희
신한 PWM광주센터 PB팀장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의 장점 때문이다.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전 금융회사 1인1개좌(소득제한 없음) 가입이 가능하며 그 해에 소득이 발생한 신규 취업자도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가입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제한된다.

세제혜택 금액과 의무가입기간은 가입대상자별로 달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비교세 한도는 25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그 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의 경우 비교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 까지 납입가능하고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ISA와 통합 관리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절세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두 개의 금

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과 9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면 기존 개별상품별 투자시 이익이 난 300만원에 대한 세금이 462,000원(300만원×15.4%)인 반면 ISA내 투자시 손익통산 순이익 210만원 중 200만원비과세 10만원에 대한 세금 9,900원(10만원×9.9%)으로 452,1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앞서 사례에서 비과세 250만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46만2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요즘처럼 초저금리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에는 이렇게 절세효과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ISA에 가입할 때 각 금융회사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수수료율 및 수익률 등을 잘 따져야 한다. ISA는 5년 의무 가입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수료가 있는 투자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국내주식형펀드와 해외주식형펀드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ISA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채권이나, ELS등 기존

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품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적금의 경우 이자가 낮은 단기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장기상품 가입을, 투자성향이 맞다면 저위험 저수익보다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 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익이 나면 수익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커지고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ISA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상품선택과 그에 대한 비교를 꼼꼼히 하면 비과세 한도를 누릴 수 있다.

ISA에 상품을 최대한 편입하여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 한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두배의 효과가 볼 수도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ISA는 시장상황에 맞게 상품간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인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개인의 투자성과 자금수용계획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